

“지방행정 공백 없어야” 행정안전부,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 개최

- 중동전쟁 장기화·지방선거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 확대
- 공직기강 확립 및 차질없는 업무수행 당부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4월 2일(목) 최근 국정 상황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「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」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.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6·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, 업무 전반의 긴장도를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되었다.
-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민생과 직결된 정책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첫째, 지방행정 공백 및 주요 정책 누수 방지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행정 연속성을 확고히 유지하고, 주요 국정현안과 지역 당면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둘째,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복무관리와 행동기준을 재점검하고, 선거 국면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,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.

- 셋째,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봄철 산불, 산업현장 안전사고 등 계절적 위험요인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, 현장 중심의 예방·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 - 넷째, 고유가·고물가 부담 완화 및 국민일상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의 취지를 고려, 취약계층 지원·민생안정 사업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추경효과가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김민재 차관은 “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선거 국면이 겹치는 상황일수록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긴장감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
- 특히, “지금은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는 부족하며, 비상한 인식과 실행력으로 임해야한다”고 강조하면서 “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주무관	김현동 (044-205-3106)

